

제281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
제1차 회의 2021. 9. 8.(목)

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1. 제안경과

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
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행정안전부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
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
확보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민간위탁, 수탁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(안 제2조)
- 나. 불필요한 공증 의무 규정 삭제 (안 제10조)
- 다.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(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에 맞지 않는
이의신청 조항 정비 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자치행정과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법령 불부합 조문과 계약체결 시 불필요한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, 그 외에 모호한 표현을 자치법규 입안 정비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.

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 수탁기관과의 협약 체결 시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한 것을 계약으로 변경하여 공증의무를 삭제하였는데, 이는 2020년 감사원이 실시한 ‘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업무 실태조사’에서 공증의무가 불필요한 규제라며 해당 규정을 삭제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함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으며,

안 제13조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는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시 90일 이내,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도록 하였는데, 이는 위 법률이 2016년 2월 12일 전부개정되어 이의신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 이내로 변경되었기에 위법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에 기본 조례를 상위법령과 정비 권고안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동 조례 개정 후에도 세출 및 세입의 증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사항이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행정기획실 자치행정과장 이유미

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제35조(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참 고 자 료

1 민간위탁 협약 공중의무 규정 삭제

<정비배경 및 문제점>

- (정비배경) 불필요한 절차·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중의무 규정 개정을 지도·권고하는 방안 마련 통보 (감사원)
- (불필요한 절차·비용) 민간위탁 계약서·협약서의 경우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함
 - 실무상 민간위탁과 관련한 법적분쟁 중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
 -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되더라도 계약서·협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어렵지 않음

< 민사소송법 >

제356조(공문서의 진정의 추정) ①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**진정한 공문서로 추정**한다.

제358조(사문서의 진정의 추정) 사문서는 **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(拇印)**이 있는 때에는 **진정한 것으로 추정**한다.

※ 담당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민간위탁 계약서·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하여 「민사소송법」 제356조에 따라 진정성립 추정될 것임. 실무적으로 작성과정에서 수탁자의 개입·수정 여부 및 정도 등에 따라 사문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수탁자의 서명·날인으로 「민사소송법」 제358조에 따라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을 수 있음.

<정비방향>

- (규정 삭제) 불필요한 절차·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으므로 공증의무 규정 및 수탁자 비용부담 규정 삭제